

# 주간 통일정세

2014-41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南, 군사적 충돌 방지 조치 취해야"(10/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이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과 19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총격전과 25일로 예정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북한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북 남한 당국이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을 전함.
  - 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 있는 2차 북남 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황병서 군 총참모장 등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으로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조평통 "빠라 살포하면 남북관계 회복불능 파국"(10/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에서 10월 25일로 예정된 국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된다면 "북남관계가 회복불능의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빠라 살포를 막는가 묵인하는가 하는 것은 대화냐 대결이냐, 북남관계 개선이냐 파국이냐 하는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은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느니 '자율성'이니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며 (빠라 살포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남측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남북관계 개선 연일 강조…“대화판 흔들면 안돼” (10/2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과연 누가 대화의 판을 흔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고 "남조선 당국자들이 다음 기(2차) 고위급 접촉을 바란다면 말과 행동을 심중하게 해 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도 21일 '우리 민족끼리는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어렵게 마련된 좋은 분위기를 적극 살려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고위급접촉 '조건'으로 대화 분위기 연일 강조(10/2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올바른 대화 자세와 입장부터 갖추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의 북남관계 상황에서는 마주 앉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대화를 하겠으면 올바른 대화 자세와 입장부터 갖추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도 23일 '자주성이 없으면 민족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 민족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화해·단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사대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따르고 민족 공조를 실현하는 것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함.
  - 이어 민주조선도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과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비난…“반북 책동” (10/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동북아시아평화협력구상은 한마디로 우리의 핵 포기과 흡수통일을 노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합작품이며 이번 연단(포럼)도 그런 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이 초미의 문제"라며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돌리며,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빠라 살포는 전쟁행위"...정부에 저지 촉구(10/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북남관계의 완전파탄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 중상하는 빠라 살포망동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그 후과(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남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수 있고 실제로 과거 남북관계 파국을 우려해 법적으로 막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어 신문은 '적대행위 종식은 10·4선언의 요구'라는 글에서도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10·4선언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공화국 빠라 살포를 계속 묵인조장할 것이 아니라 그에 단호히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함.
  
- 北 통신 "경찰, 빠라 저지 못 할망정 진보단체 막아"(10/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남조선 각계 반공화국 빠라 살포 망동에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주민 등이 대북전단의 살포를 규탄하거나 저지하고 있다고 소개함.
  - 통신은 "이날 괴뢰경찰은 보수단체들의 빠라 살포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진보단체 성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MDL 총격전 관련 "예상할수 없는 보복조치" 위협(10/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0일 통일부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 자신들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순찰활동에 대해 남측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비난했음을 전함.
  - 이어 서해 군(軍) 통신선을 통해 20일 오전에 보낸 전통문에서도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우리측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음을 보도함.
  
- "북한 신형 잠수함, 위성사진으로 확인"(10/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군사전문에 정통한 조셉 버뮤데즈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북한 잠수함 기지와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실포 남부 조선소의 선박정박구역에서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정박 중인 것으로 드러났음을 전함.
  
- 北선박 32척 식별정보 변경...제재회피 목적(10/21, NK뉴스)
  - NK뉴스는 21일 보도를 통해 세계 선박 관련 정보 웹사이트인 『마린트래픽』 자료를 조회한 결과 올해 들어 MMSI(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변경한 북한 선박이 32척에 달했다고 전함.
  - NK뉴스는 MMSI의 변경은 배의 명칭, 국적, 소유주 등을 바꾼 것을 의미하며, 북한 선박들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남북 사회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윤병세 외교부장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최근 대북발언(北의 핵과 인권문제 등)에 대해 "얼빠진 잠꼬대"라고 비난하며 '이들 때문에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찬서리를 맞고 있다'고 주장(10.20, 중앙통신·노동신문)
- 6자회담 수석대표(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對北발언(北은 인권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진해야 한다 등) 관련 '자위적인 핵과 병진노선을 헐뜯는 것은 우리(北)를 무장해제 시키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왜곡하며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이루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10.22, 평양방송)
- 北 「조국통일연구원」, 10월 24일 '韓美 당국이 南 민간단체들(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對北 배라 살포 주범'이라며 '자금지원과 살포기술 제공' 등 주장 '백서' 발표(10.24, 중앙통신·평양방송)
- 現 남북관계에 대해 "대화의 불씨를 살리느냐(제2차 고위급접촉 합의) 아니면 극단으로 치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南 당국의 분별있는 처신'을 주장(10.24,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북전단 살포는 '북남관계의 파국은 물론 전쟁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우리(北)의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 위협(10.26, 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신문, '反서방 중심'으로 러시아 부각 주목 (10/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토의 무력창설 움직임은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움직임을 크게 부각함.

- 北 '유엔의 날' 맞아 "안보리 개혁해야" 거듭 주장(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유엔은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유엔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주장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北, 특사 없이 美항공편으로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씨 석방(10/22, AP통신; 조선중앙통신)
  - AP통신은 22일 보도를 통해 새벽 시간에 평양 순안공항으로 간 미국 군용기가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를 태우고 미국령 괌으로 이동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도 22일 보도를 통해 추방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번 석방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해 취한 특별조치라는 점을 강조함.
- 北 국방위, 美 인권공세 비난... '강경대응전' 천명(10/25, 조선중앙통신)
  - 국방위원회는 25일 성명에서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 미국의 '인권 소동'에 대한 새로운 '강경대응선전'을 포고한다며 "인권 유린자들의 본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우리식의 새로운 강경대응전에 진입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새로운 대응과 관련해 "강위력한 핵무력과 지상, 해상, 수중, 공중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첨단타격 수단들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함.

- 이어 "이 기회에 미국 주도의 침략공조를 거센 반미공조로 짓부쉬버릴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 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강조함.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유엔 北 차석대사 "北 인권 현장실사도 논의 가능"(10/22, 미국의 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2일 보도를 통해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대화'를 강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인권 실태의 현장실사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북, 인권 문제 비판에 이례적 적극 대응 (10/22, 뉴스위크)
  - 뉴스위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외에도 북한 외무성에서 이번 토론회를 위해 파견한 최영남도 참석했음을 전함.
  - 이어 이들이 장시간 계속된 토론회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마이클 커피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장 등을 들으면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 자. 기타 국가

### ■ 특이사항 없음

- 前 美 국방장관(패네타)의 회고록 내용(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에 대해 "또 하나의 엄청난 대조선 핵위협 증거"라며 '우리(北)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책동을 박살내는 순간까지 자위적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10.20, 중앙통신)
- 미국의 중동지역 무인기 공습(민간인 8명 사망, 6명 부상)을 거론하며 "미국의 '반테러전'이 인권유린, 인간 살육전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혀야 할 중죄인'이라고 비난(10.20,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美 '제네바 합의' 20주년(10.21) 관련 現 '北-美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처하게 된 것은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의 지속 때문'이라고 '미국의 反北정책 포기 등 태도변화' 주장(10.21,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해군이 새로 개발한 무인 로봇 초계정의 말라카·호르무즈해협 등 실전배치(美 군함호위 등) 계획에 대해 "국제적인 주요해상통로들을 장악하고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노린 것"이라며 '미국의 신무기 개발·군사적 패권전략' 비난(10.21,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본토 주둔 8기갑연대 3대대를 동두천 등에 순환배치하려는 계획 관련 '범죄적인 무력개입으로 저들의 지배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駐韓美軍철수 주장(10.22, 평양방송)
- 리수용(외무상), 10월 23일 신임 주북 스웨덴 대사(산러브 보 토르켈)와 담화(10.23, 중앙통신)
-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 10월 23일 '노동당 창건'(10.10) 69주년을 즈음하여 강석주(당 비서) 등을 초대한 가운데 연회 마련(10.23, 중앙통신)
- 「유엔의 날(10.24)」 관련 "유엔은 자기의 활동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의 책임성·공정성·객관성 보장과 개발도상국들의 대표권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개혁 결단'을 주장(10.24,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중앙방송)
- 前 美 국방장관 '패네타' 회고록(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지속 거론하며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와 그 해결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며 '北, NPT 탈퇴·핵보유 정당성' 주장(10.24, 평양방송)
- '독일-북한의원단' 위원장(하르트무트 쿠슈크) 일행, 10월 24일 訪北(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국방위 성명(10.25)에서 미국의 北 인권공세 관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몽개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새로운 강경대응선전'을 포고(10.25,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또 과학자 복지시설 시찰... '과학중시' 과시(10/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박명철 전 체육상,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함께 건설부대 지휘관 로경준·김진근, 장철 국가과학원장, 김운기 국가과학원 당 책임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평안남도의 명승지 연풍호에 들어선 과학자 복지시설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연풍과학자휴양소가 북한군 제267부대가 맡아 4개월여 만에 완공되었다고 설명했으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종합봉사소, 휴양각, 휴식터, 산책로, 다용도 야외운동장 등 휴양소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함.
  - 이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며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잇단 軍부대 시찰... 연합 실동훈련 참관(10/24,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을 지도"했음을 전함.
  - 통신은 이번 군사훈련 지도에 최룡해 당 비서와 오일정 당 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감시소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나서 "오늘 훈련이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 관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싸움은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정황이 조성될 수 있다"며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현대전'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을 전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북한군의 '실동훈련'이 우리 군의 실기동훈련(FTX)에 해당하고 쌍방 실동훈련은 2개 부대가 실전 상황을 가정해 공격과 방어 연습을

하는 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완공된 평양 육아원·애육원 시찰(10/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된 평양 육아원·애육원을 현지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육아원·애육원 방문에 최룡해·김기남 노동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과 건설부대 지휘관인 로경준·김진근이 안내했다고 전함.
  - 여전히 지팡이를 짚은 김 제1위원장은 평양 육아원·애육원을 둘러보며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며 만족을 표시하고 "이런 시설을 꾸려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원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보육교사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조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리수용, 방북 러 극동개발부 장관 면담(10/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이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만나 담화했다고 전함.
- 北 '체육계 거물' 박명철 다시 등장...김정은 수행(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 소식과 함께 게재한 사진에서 인민복 차림으로 서 있는 박 전 체육상의 모습을 전함.
- 北 리룡남, 방북 러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10/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보도를 통해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23일 방북 중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전함.
  - 통신은 23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무역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만 전하고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다. 공식 행사

- 北 '오백룡 생일 100돌 잔치'...항일빨치산 우대 전통(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2면과 3면에 걸쳐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전날 열린 '오백룡 생일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대해 보도했으며, 김기남 당 비서,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 김정임 당역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연설했다고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인권문제 전방위 반격... '김정은 구하기' 나서(10/26,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2014년 8월15일 발행)는 '개인을 국제인권법 당사자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제인권법으로 개인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논문은 "국제인권법은 인권 보장과 관련한 국가들의 행위 규범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법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며 "국가는 국제인권법 규정에서 합의된 권리·의무를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실행한다"고 설명함.
  - 이어 이런 이유로 국제인권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국제법적 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할 능력과 자격을 가진 국가라며 "개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1일 故 박영순(만수대예술단 고문·인민배우) 빈소에 조화 전달(10.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에게 전하는 살림집 이용증서 수여 모임, 10월 20일 대학체육관에서 최태복(당 비서)·김승두(교육위원장)·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1, 중앙방송)
- 제25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식, 10월 2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최태복·김용진(내각 부총리)·김승두·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아프리카 순방길 북한 김영남, 베이징 도착(10/21, 조선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10월 22일 駐北 신임 베트남 대사와 담화(10.22, 중앙통신)
- '도덕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인민을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수는 필수적 요구'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10.23, 중앙통신·노동신문)
- 회령혁명사적관 창립('74.10.24) 40주년 기념보고회, 10월 23일 전승훈(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0.23, 중앙통신)
- 故 오백룡(前 黨 군사부장) 생일(10.24) 100주년 즈음 최룡해(黨 비서)·현영철(인민무력 부장)·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참석, 10월 24일 '오백룡 반신상(대성산혁명열사릉)'에 헌화(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연풍과학자 휴양소 준공식(\*김정은 현지도, 10월 22일 보도), 10월 24일 김기남·최태복(黨 비서)·박태성(평안남도 黨 책임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4,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3일 수단 도착 및 대통령(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과 회담(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외, 강하국(보건상), 궁석웅(외무성 부상), 서길복(대외경제성 부상), 김혁철(駐수단 北대사) 등 참가 10월 24일 수단 민족회의청사에서 민족회의 의장과 담화 및 연회 참가(10.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김룡원), 10월 25일 귀국(10.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 10월 25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새집들이를 한 교원·연구사가정들을 찾아 축하(10.25, 중앙통신)
- 北 철도성 대표단(단장 : 전길수 철도상), 10월 26일 러시아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 참가 후 귀환(10.2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지도, 최룡해·김기남(黨 비서들), 한광성(黨 부장), 리재일(黨 제1부부장) 동행, 현지에서 미원춘(국방위 설계국장인 육군 중장), 로경준, 김진근 등이 맞이(10.26,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0월 26일 故 계훈경(인민예술가, 공훈국가합창단 작곡가) 빈소에 화환 전달(10.27, 중앙통신·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北 신문 "모든 일에 과학기술 활용 실적 개선" 독려(10/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나그쳐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무슨 일이나 과학적 기초 위에서 설계하고 작전하며 과학적 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해 해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함.
  -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으며 교육과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 부문에서도 과학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노동신문 "과학기술 이용 경제적 실리 극대화해야"(10/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확립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며 "실리를 따지지 않으면 밀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나아가서 국가가 커다란 인적, 물적 손실을 입게 되고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힘.
  - 이어 "경제사업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자면 생산과 관리를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해야 한다"며 "마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객관적 법칙에 관계없이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흑심한 주관주의이며 과학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함.

###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과학중시' 열풍 속 대학 연구성과 자랑(10/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각지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현실에 들어가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성과를 소개함.

- 北, 평양 도심·교외서 대규모 주택단지 동시 건설(10/2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1일 "(평양시) 용성·서포·역포 철길 주변 살림집(주택) 건설에 펼쳐나선 군인 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건설자들의 열의에 의해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며 골조공사는 64%, 마감공사는 60% 정도 다다랐다고 전함.
  - 방송은 또 형제산구역 서룡동지역 주택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은 이달 말까지 2천200여 가구의 골조공사를 전부 끝내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목표를 세웠고 역포지구에서는 올해 입주 계획 가구의 주택 공사가 90% 마무리됐다고 보도함.
  
-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건설 마무리 단계(10/22, AP통신)
  - 미국 AP통신은 2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공항 2청사 건설이 마무리 단계이며, 공항 건설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최단시간에 끝내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는 '속도전'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전함.
  - 통신은 평양이 항공편을 통해 '은둔의 나라'인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만, 공항은 큰 창고 크기 규모의 임시 터미널과 단 하나밖에 없는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자그마한 면세점 및 서적·기념품 가게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함.

#### 다. 경제 상황

- 평양에 택시급증...1천대 훌쩍제 운행(10/21, 지지통신)
  - 지지통신은 21일 보도에서 북한을 다녀온 학자인 동아시아학 연구자 아라마키 마사유키(46, 荒卷正行)를 인용해 평양에 택시가 급증해 북한 당국이 훌쩍제로 운행 대수를 관리하고 있음을 전함.
  - 이어 지난달 평양을 방문해 택시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조사 한 결과 "택시업계에 새로운 외국자본이 참가해 단번에 대수가 늘어났다"며 "여명이었던 업계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수요에 맞춘 도태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서 달러·엔화로 물건 사면 위안화로 거스름돈(10/26, 연합뉴스)
  - 26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최근 학술 교류단의 일원으로 1주일간 북한에 다녀온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 23~24일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힘.
  -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머리를 말총처럼 뒤로 묶는 이른바 '포니테일' 스타일이나 하이힐이 유행하는 등 북한 사회가 부쩍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평양에 택시가 대량으로 보급됐고 출퇴근 시간에 정체 수준은 아니지만, 차량이 꽤 많이 다니는 등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힘.
  - 이어 평양에서 달러나 엔화로 물건을 사면 위안화로 거슬러 줄 정도로 중국 화폐 사용이 보편화했고 북한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에도 중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함.
  -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북한이 작년에 전년도보다 30만t 늘어난 566만t의 곡물을 생산했고 올해는 가뭄을 겪었음에도 비슷한 정도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고 식량 상황을 전함.

##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인구 절반 준비된 노동력"...중국기업에 '손짓'(10/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개막해 20일 막을 내린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이 박람회 기간 중국기업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데 공을 들였음을 보도함.
  - 뉴스는 북한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에서 공개한 홍보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이 "교육수준이 높고 지적잠재력이 튼튼히 준비돼 있다"면서 "무상 의무교육제도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임의의 직종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된 노동력이 2008년 기준으로 1천217만 6천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며, "종족, 종교, 당파, 지역, 계급간 대립과 모순이 없고 실업, 파업, 태업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음을 보도함.

- 이어 북한이 이번 박람회에서 현재 자국에 국가급 경제특구가 9곳, 각 도(道)의 지방급 경제특구가 16곳이 있다고 홍보했음을 전함.

■ 러시아-북한 교역서 러 통화 루블화 결제 시작(10/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올린 20일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양국이 제6차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합의에 따라 루블화 결제를 시작했다"며, 20일 부터 닷새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방북 기간 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과 남-북-러 3각 협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 北, 러시아와 협력해 평덕-평남선 철도 개보수 착수(10/21, 조선중앙통신; 러시아의소리)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재동역(평안남도 은산군)~강동역(평양시 강동군)~남포역(남포시) 구간 철도 개건 착공식이 21일 동평양역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러시아의소리방송도 21일 착공식 소식과 함께 '포베다(승리)'라는 명칭이 붙은 이번 북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250억 달러(26조 3천625억 원)라며 "새로운 구간의 철도 건설 작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화물 운송을 위해 남부 간선과 북부 간선이 평양을 우회하도록 계획했다"고 소개함.

- 평안북도 창성군 일꾼들과 근로자들, 수백 톤의 '산열매'(도토리, 다래, 머루 등) 수확성과 선전(10.20, 중앙방송)
- 제3차 北-中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 10월 16일~20일 중국 단둥에서 '北-中 경제무역합작투자설명회 및 항목 조인식' 등 진행(10.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선희(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장), 지난 해 "보충영양원 개발과 10여개 버섯품종 개발 등 과학연구사업 성과" 선전(10.21, 중앙통신)
- 전국 제염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10월 22일 남포시 온천군에서 진행(10.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인쇄부문 과학기술발표회(70여건 논문 발표), 10월 23일·24일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개최(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태양빛자동추적장치"의 성능시험(중전 전력생산 1.3배 증가) 등 선전(10.24, 중앙통신)
- 北 경제대표단(단장: 리명산 대외경제성 부상), 10월 25일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차 평양 출발(10.2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평양시의 도로보수 및 주변정리 등을 소개하며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을

-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10.26, 중앙통신)  
 - 평양시, 170동의 박막온실 내·외부 기본공사와 40여 동의 소층 살림집 골조공사 완료(10.26, 중앙방송)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노동신문 "에볼라 방역 급선무...보건 개선해야"(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6면에 실린 '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적 확산 우려를 낳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방역사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낙후한 보건 분야의 개선을 독려함.
  - 이어 신문은 '죽음의 병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경검역사업을 강화해 이 병(에볼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함.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 특이사항 없음

- 北 축구선수들, '2014 AFC U-19 챔피언십' 준결승전(10.20)에서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이기고 결승 진출(10.21, 중앙통신)
- [공화국선수권대회(평양과 각지에서 11월까지 40개 종목)] 진행 및 사격·양궁·수영 종목에서 "5개의 공화국 신기록 수립" 등 10월 20일 현재, 경기 결과 보도(10.21, 중앙통신)
- 전국 바둑애호가 경기, 10.18~22 태권도전당에서 진행(10.22, 중앙통신)
- 제45회 예술인체육대회(축구·농구·씨름 등 20개 종목), 10월 24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박춘남(문화상)·안동춘(문예총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6명(김은국·엄윤철·김광민·라은심·허은별·박기성)과 국제체조연맹(FIG)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리세광에 훈장 표창(10.25, 조선통신)
- 김책공대 교직원 학생들, 10월 25일 '김정은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꺾기모임 진행(10.26, 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신형 잠수함, 위성사진으로 확인" <38노스> (10/22, 연합뉴스)
  - 북한 군사전문에 정통한 조셉 버뮤데즈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북한 잠수함 기지와 조선소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설명함.
  - 버뮤데즈는 "실포 남부 조선소의 선박정박구역에서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정박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포봉대보일러 공장으로 알려진 이 조선소는 북한 잠수함을 제조하는 중요 시설이자 국방과학원의 해양연구소 본부가 위치해있는 곳"이라고 소개함.
  - 위성사진 판독결과, 문제의 잠수함은 길이가 약 67m, 폭이 6.6m에 달하며 선수(船首)가 둥그렇고 배 중간에 전망탑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선미(船尾) 뒷부분의 잠행수평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버뮤데즈는 이 같은 구조로 볼 때 이 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900~1천500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함.
- 스캐퍼로티 주한 미 사령관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갖춰" (10/25, 연합뉴스)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언급, "북한은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갖고있다고 주장한다"며 "나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해 2월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나. 미·북 관계

- 北, 북제네바합의 20주년 맞아 美에 태도 변화 요구 (10/21, 연합뉴스)
  -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 20주년이 되는 21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실패한 것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미국에 태도 변화를 요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핵문제 해결의 길을 막아버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어떻게 돼 조미 기본합의문(북미 제네바합의문)이 깨져나가고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이 확인해졌다"며 "모든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가 최근 서울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시비하기 전에 현 사태를 몰아온 자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라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임.
  
- 미 "북 핵실험 유예·핵활동 중단 때 6자회담 가능" (10/22, 연합뉴스)
  -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현행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사일러 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카네기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묻는 말에 "만일 북한이 회담복귀를 선언 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활동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며 "전 세계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사일러 특사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이지만 현실적인 비핵화 경로가 있다고 본다"며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지적한 대로 '더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no more bombs),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고(no testing), 핵폭탄과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지 않는(no export)'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억류 미국인 파울, 6개월 만에 귀국 (10/23,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됐다가 6개월 만에 석방된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이 22일(현지 시간) 고향인 오하이오로 무사히 돌아옴.
  - 파울 석방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토니 홀 전 하원의원은 "파울이 석방돼 매우 기쁘다"면서 "그의 석방을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했다. 북한과 끈이 있는 중국, 일본과 함께 몽골 특사,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등이 관여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하여 미국인 범죄자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김 제1위원장이 수용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과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됨.
  
- 北 국방위, 美 인권공세 비난... '강력대응전' 천명 (10/25,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5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힘.
  - 국방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이번 성명은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처리 등을 앞두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됨.

#### 다. 중·북 관계

- 중국 관영매체 '탈북자 문제' 심층조명 (10/21, 연합뉴스)
  - 중국의 주요 관영매체가 북중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강제북송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조선족-탈북자 가정'의 비극을 심층 조명한 기사를 게재해 배경에 관심이 주목됨.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1일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기사에서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복송과 그로 인한 비극적 실례들을 거론하며 "중국의 조선족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는 가족의 문제"라고 주장함.
  - 이 신문이 이처럼 조선족-탈북자 가족의 비극적 사례를 잇달아 소개한 것은 결국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강제복송 등 북한정권을 의식한 탈북자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주요 인권현안으로 다뤄지는 탈북자 문제는 중국이 언급 자체를 꺼리는 민감한 주제로, 중국 관영매체가 이런 기사를 이례적으로 게재한 것은 냉각된 북중 관계 및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 조짐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올해 북·중 박람회, 무역·투자의향서 체결 10% 감소 (10/2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서 체결된 무역·투자의향서(LOI) 규모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지난 16~20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올해 북·중 박람회에서 총 13억 6천만 달러(1조 3천350억 원) 상당의 무역·투자의향서가 체결했다고 21일 보도함.
    - 이 가운데 무역거래의향서는 60건, 12억6천만달러(1조 3천300억 원)이고 투자의향서는 8건, 1억달러(1천50억 원)로 집계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박람회에서 북·중 기업들 사이에 무역거래의향서 67건, 10억9천만달러(1조 1500억 원)와 투자의향서 35건, 5억 1천만 달러(5천380억 원) 등 총 16억 달러(1조 6천800억 원) 상당의 의향서가 체결된 것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으로 15% 감소한 것임.
  - 중국, 북한 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반대 (10/23,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데 대해 23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ICC 회부 추진 문제와 관련해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 분야의 견해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고 말함.

- 이는 최근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 인권 행위 관련자를 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도 관측됨.

■ 중국 투자지침서 발간...“북한선 배추 1kg에 42센트” (10/23,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가 22일 발간된 해외 투자 및 무역 지침서에는 "북한에선 배추 1kg 가격이 42센트(442원)이다. 이란에서는 '쨍그랑'하고 건배하지 말라. 미국에선 지역주민들과 함께 중국 전통 축제를 즐겨라"고 적혀있음.
- 이 지침서에는 북한을 비롯해 세계 166개 국가 및 지역과 투자 및 교역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특히 지침서는 북한에 대해 "풍부한 지하자원과 숙련된 노동력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잠재력이 크다"면서 북한이 황금평·위화도, 나선 등 중국 접경지 두 곳에 경제특구를 개설한 이래 갈수록 많은 수의 중국인 투자자가 방북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 국유은행들도 북한 핵실험 등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지난 2013년 북한과 거래를 끊었으나, 해외 자원개발과 차관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중국개발은행(CDB)이 '실무팀'을 북한에 설립했기 때문에 중국 사업체에 신용 대출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지침서는 설명함.

## 라. 일·북 관계

■ 일본, 납치조사 파악위해 평양에 당국자 파견하기로 (10/20,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힘.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북단에는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함.
- 스가 장관은 파견 시기에 언급,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시간을 두는 것은 아니다"며 되도록 이른 시기에 파견하겠다는 뜻을 시사하였고, 이하라 국장이 방북하면 납치문제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방위원회 안전 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 러·북 관계

- 北 철도 '러시아 머니'로 현대화...북러 밀월 가속 (10/22,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재동역-강동역-남포역으로 이어지는 철도의 개건 착공식이 동평양역에서 열렸다고 "조(북)·러 인민들의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대규모 협조계획 실현의 첫 단계인 철도 개건이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 착공식 연설 내용을 소개함.
  - 이와 관련,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받는 조건으로 북한 내 철도를 개보수하기로 했다면서 '파베다'(승리)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에 시베리아 옴스크에 본사를 둔 토목건설회사 '모스토빅' 등 여러 러시아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 20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도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는 북한과의 통상경제협력의 신모델로 러시아 기업이 북한 영토에서 인프라 구축과 여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의 광물자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북한은 지하자원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전체 철도의 60~70%를 현대화하는 셈임.
- 방북 러 극동개발부 장관, 청진 경제개발구 방문 (10/23,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 중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22일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제개발구를 방문했다고 러시아의소리방송이 23일 보도함.
  - 방송은 유리 보치카레프 북한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를 인용해 청진을 방문한 갈루슈카 장관 일행을 위해 해당 지역의 북한 관계자들이 산업단지 구축과 관련한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전함.
  - 보치카레프 총영사는 러시아 대기업 대표들로 이뤄진 이번 청진 방문단이

청진화력 발전소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둘러봤다며 "이번 방문기간 양국은 경제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바. 기타

-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 "김정은 ICC 회부하면 대응조치" <NYT> (10/21, 연합뉴스)
  -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反) 인류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모종의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장 차석대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권 행태 등에 대한 유엔 보고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함.
  - 장 차석대사는 유엔 외교관계 위원회 40여 개국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보고서가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지적한 북한 내 수용소들은 '소년원'들로서 "정상적인 교도소"라며 "북한에서는 '정치범'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한다"고 언급함.
  
- 유엔 北 차석대사 "北 인권 현장실사도 논의 가능 (10/22, 연합뉴스)
  -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대화'를 강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인권 실태의 현장실사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장 차석대사는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자꾸 우리 수뇌부 걸고 드는 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들다"며 "(더이상) 이거 가만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대화하자, 협력하자"고 했다고 설명함.
  - 이어 '유엔 등의 (수용소) 현장실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토의해볼 문제"라며 허용할지 말지는 자신의 결심이 아니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선의의 조치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라고 부연했으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완전 조작"이라며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며 "자료도 제공하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마이클 커비 "북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드시 세워야" (10/23,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를 지휘했던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대표들은 COI보고서가 유도신문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최고권력자가 북한 인권 유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음.
  - 이에 대해 커비 전 위원장은 유도신문은 없었고 보고서는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언급하며, 또 국제법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를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이를 막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라고 반박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미 국무부 인권차관보 내주 방한...북한인권 논의 (10/2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가 27~28일 방한할 예정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힘.
  -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우리 정부 당국자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탈북자 등을 만나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배가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함.
  -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지난 4월 국무부에 합류하기 전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HRW)의 워싱턴지부 국장을 지냈음.
- 헤이글 "사드 배치, 결정된 바도 협의한 바도 없다" (10/24,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측과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힘.
  - 헤이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어떤 수준(고위급 또는 실무급 등)의 공식적인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공식 협의도 없었고 어떤 결정도 없다"고 거듭 말함.

- 헤이글 장관은 아울러 존 케리 국무장관의 최근 '북한 비핵화 등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미국은 현재 병력 배치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으며, 한국(주한미군 배치)과 관련해서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함.

■ 한민구 "전작권 전환의지 확실...2020년대 중반 가능" (10/24,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한미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전환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한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의미에 대해 "(SCM)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들이 매년 달성되는지를 평가하는 이행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된 의제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연합 방위태세의 미래가 다시 구축되는 것"이라고 말함.

■ 케리 미 국무 "주한미군 감축 언급은 시기상조" (10/25,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시기상조"라고 밝힘.
- 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연석회의에 참석

- 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단순히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함.
- 이에 앞서 케리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몇 주, 몇 달간 상황이 발전해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비핵화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위협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수요를 감축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한미, 평화통일기반 조성 공감...북에 핵·미사일 포기 촉구 (10/25,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
-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우리 측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측의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한미동맹과 북한, 지역문제, 글로벌파트너십 등 4개 의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또한, 양국 장관들은 회의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먼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에 따라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함.

## 나. 한·중 관계

■ 중국청년대표단 180명 방한...한·중 인문 교류 (10/21, 연합뉴스)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오는 22-29일 중국청년대표단 180명이 '한·중 인문 교류 및 한국 청년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방한해 경희대에서 말하기 대회와 한·중 인문 교류 세미나, 유학생 간담회에 참여한다고 21일 전함.
- 중국청년대표단은 중국 각 지역에서 56개 소수 민족을 망라해 선발된 20~30대 청년 인재들로, 이들은 차세대 중국을 이끌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교육받을 예정이다.
- 중국청년대표단의 방한 행사는 한·중 인문교류 확대와 중국내 친한파 육성 등의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이 주관하며 경희대가 후원하고 있음.

- **박대통령, 오늘 탕자쉬안 면담…대북메시지 주목 (10/2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4차 한중지도자포럼 참석차 방한한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함.
  - 탕 전 국무위원은 한중수교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역임했으며, 이후 2008년 중국 정부 내 외교분야 실무사령탑인 국무위원(부총리급)을 맡을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온 전문가로, 면담 자리에서는 북한 관련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 특히 북한이 지난 4일 최고위급 실세를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에 파견하면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최근 잇단 도발을 벌이면서 남북 대화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됨.
  
-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선언…한국 일단 '불참' (10/21, 연합뉴스)**
  - 중국이 24일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공식 선언함.
  - 중국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포함한 AIIB 참가의사를 밝힌 21개국이 모인 가운데 AIIB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등이 보도했다.
  - 이와 관련, 한국은 중국 측에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전히 가입 여부를 논의 중이며 지난 22일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OU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AIIB에 불참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힘.
  
-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관광산업 대구 강점 살려야" (10/22, 연합뉴스)**
  -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2일 인터불고호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대구-중국 간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중국 관광객들이 대구를 많이 찾으려면 의료관광 등 대구만의

관광산업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이 자리에서 권 시장으로부터 "중국 관광객이 대구에 오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관광객 증대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말함.
- 탕 위원은 또 대구의 의료관광에 대한 권 시장의 설명을 듣고 "중국 관광객들이 대구를 많이 찾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차 대구를 많이 찾으려면 서울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함.

■ 中 탕자쉬안 "AIIB는 대세"…한국 참여 결단 촉구 (10/22, 연합뉴스)

- 한중 지도자포럼 참석차 방한한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아시아인프라 개발은행(AIIB) 참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짐.
- 탕 전 국무위원은 박 대통령 예방 후 우리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AIIB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국제 금융계에서 한국은 능력을 더 보여줘야 한다. 한국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런 점을 박 대통령에게도 설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의 한국 참여 압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실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는 차원에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우리측 고민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중·러 전문가 "물류협력 강화, 공동이익에 부합" (10/23, 연합뉴스)

- '동북아 물류협력 선상포럼'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초국경 협력을 골자로 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이 관련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함.
- 특히 한국의 동해안과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을 잇는 물류망 확충을 통해 상생공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은 22일 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간 협력의 개념과 범위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그동안 한-중, 한-러, 남-북간 협력과 같은 양자협력은 꾸준히 추진됐지만 한·중·러를 근간으로 한 다자간협력은 오랜 기간 논의하지 못했던 개념"이라고 강조함.

## 다. 한·일 관계

- 일본 관방장관 "위안소내 강제성 판단은 역사학자에게" (10/22,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과거 전쟁시기 일본군 '위안소' 내부에서 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강제성에 대해 "그것은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말함.
  - 최근 군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는 국내외 홍보에 집중하는 아베 내각이 '위안소' 안에서 강제적으로 성(性) 상대가 되길 강요당한 데 대해서는 '역사학자에게 맡기자'며 발을 뺀 셈임.
  - 이는 결국 군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 유무의 문제로 축소하는 한편, 최근 아사히 신문의 오보 인정을 빌미 삼아 강제연행 사실이 없다고 홍보함으로써 군위안부 제도 자체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아베 내각의 의중이 드러난 대목으로 풀이됨.
- 아베, '한일관계 개선 메시지' 박 대통령에 전달 부탁 (10/2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하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에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누카가 전 재무상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힘.
  - 앞서 마이니치(毎日)신문은 누카가 씨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일의원 합동총회(25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는 기회에 24일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정부 "日정부 고노담화 역행 언행 반복 매우 실망" (10/22, 연합뉴스)
  -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고노담화 발표 당시 기자회견 발언을 최근 문제삼은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22일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한편 으로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국제사회가 명확히 판정을 내린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를 부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과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아베 정부 "고노담화와 요시다 증언은 무관" (10/24,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정부는 24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 (1993년)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담화'(95년)에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작고) 씨의 증언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정부 답변서를 각의(閣議) 결정함.
  - 요시다 씨는 1970년대부터 고백 수기 등을 통해 자신이 태평양 전쟁 말기 시모노세키(下關)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한국에 건너가 위안부와 징용 노무자들을 대거 강제연행 했다고 증언했던 사람임.
  -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의 질의에 대해 아베 정부가 내놓은 이 답변서는 고노담화 근거와 요시다 증언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임.
- 일본 NSC국장 "다음달 한일정상회담 어렵다" 아베에 보고 (10/24, 연합뉴스)
  -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일본판 NSC 국장)이 다음 달에 국제회의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 經濟)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야치 국장은 21~22일 한국 방문 중 이뤄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요인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아베 총리에게 이런 취지로 23일 보고함.
  - 일본 정부의 관계자는 야치 국장의 한국 방문에 관해 "(일련의 회담에서) 정상회담의 의제조차 나오지 않았다. 일부러 외교·안보의 책임자가 나섰는데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라고 평하였음.
- 日차세대당 간사장 "위안부 강제연행 없었다" 국회결의 추진 (10/24, 연합뉴스)
  -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 차세대당 간사장(중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국회 결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고노(河野)담화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결의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23일 기자들에게 밝힘.
- 야마다 간사장은 올해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발표에 직전에 이뤄진 군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집요하게 문제 제기해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과정을 검증하는 계기를 만든 인물로, 그가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낳을 것으로 보임.

■ 정의장 내일 방일...“위안부문제, 日 결자해지해야”(10/25, 연합뉴스)

-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목의 가시처럼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며 "이 문제는 일본의 결자해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함.
- 정 의장은 일본 방문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양국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다시는 인간 생명의 말살과 인간 존엄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아베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다"고 밝힘.
- 이어 "한일관계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함.

## 라. 미·중 관계

■ 美中 국무장관, '홍콩·남중국해' 놓고 충돌 (10/20,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 위원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린 회담에서 홍콩, 사이버 해킹,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충돌한 것으로 20일 전해짐.
- 양제츠 국무위원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홍콩의 시위 사태와

관련해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 것으로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 측에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0일 전함.

- 미국 국무부 관리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그들(두 사람)이 이견과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고 의제에는 인권 문제와 보편적 기본권, 홍콩 사태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함.

#### ■ 중국, 주일미군 '레이더 투입' 반대 (10/23,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최근 주일 미군이 일본 기지에 미사일 방어용 레이더를 추가 투입한 데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개별 국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일방적인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과 상호 신뢰,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함.
- 한편, 주일 미군은 최근 일본 교토부(京都府) 교탄고(京丹後)시 미군 교가미사키(經ヶ岬) 통신소에 일본 미사일 조기경계 장비인 '엑스(X)밴드 레이더(TPY-2 레이더)'를 반입했으며 이 레이더는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함.

### 마. 미·일 관계

#### ■ 미일, 주일미군기지 환경관리 강화하기로 (10/21,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기지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새 협정은 미국 정부가 더 엄격한 환경 관리 기준을 채용해 주일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을 막고 오염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 당국이 기지에 들어가 검사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정하도록 함.
-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합의로 장래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기지에 들어가 토양 조사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함.

- "미일, 다음 달 아미미 군도서 대규모 훈련" <요미우리> (10/22,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은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미미(奄美) 군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방위성을 인용해 보도함.
  - 자위대는 일본 도서지역에 대규모 무력 공격이 발생했다는 가정에 따라 미군 항공모함과 연계해 적국 항공기와 함정의 침입을 저지하고 자위대의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미군기로 수송하는 등의 훈련을 할 예정임.
  - 이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 등에서 군사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 공동대처 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 "미일, 우주감시 협력강화...자위대에 전문부대 신설" (10/22,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재개정할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우주 감시 협력 강화를 포함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2일 보도함.
  - 일본 방위성은 특히 미군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간의 정보 공유를 본격화하기 위해 자위대에 전문 부대를 신설, JAXA의 위성 감시 업무를 이관시킬 계획임.
  - 미국은 중국의 위성 공격 능력 향상 등으로 우주 공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 일본 등 동맹·우호국과의 공조 강화를 중시해 왔으며, 일본은 JAXA의 위성 안전 감시 대상을 앞으로 타국의 군사 위성과 안보상의 영향이 큰 정보수집 위성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美 당국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연기 시사" <교도> (10/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맞춰 자위대의 구체적 활동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려면 개정이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최근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일본에서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된 관련법 정비 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고려해 미국이 개정시기에 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가 집단자위권에 관해 '적절히 반영'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친 것에 관해 "집단자위권 전체를 상세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자위대의 활동 내용을 부분적으로라도 명기해야 한다"고 밝힘.

- 교도통신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과 일본이 애초 가이드라인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 것에 관해 "(최종) 기한이 아니라 목표"라는 뜻을 표명한 적이 있으나 미국 측이 내년 4월 이후라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함.
- 미 해군,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 추가 배치 (10/23, 연합뉴스)
  - 미국 해군은 22일(현지시간) 2017년까지 일본에 탄도 미사일 방어(BMD)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힘.
  - 현재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소속인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DDG 65)는 내년 여름에, 밀리우스(DDG 69)는 2017년 여름에 각각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기지의 제7함대 전진배치 해군부대에 배치됨.
  - 앞서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로 2017년 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호위함, 남중국해서 미국항모와 장기 합동훈련" (10/24,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미국 항공모함과 1개월 일정으로 남중국해 등지에서 합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24일 보도함.
  - 이달 중 시작해 다음 달까지 1개월 전후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히로시마(廣島)현 구레(呉) 기지 소속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 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미 해군 핵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함.
  - 그간 일본 호위함이 미국 항모와 수일 또는 수주 일정으로 훈련을 함께 한 적은 있었지만 한달 가량 합동훈련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훈련은 지난 7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한 미일동맹 '업그レード'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됨.

## 바. 중·일 관계

- 주미 중국대사 "일본 아베 내각은 거꾸로 달리는 차" (10/20, 연합뉴스)
  - 추이텐카이(崔天凱) 미국주재 중국대사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공물 봉납과 내각 각료의 신사 참배에 대해 "거꾸로 달리는 차"라고 비난함.
  - 추이 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차대전 기간 중미 협력'을 주제로 한 국가기록사진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일본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현지말로 보도함.
  - 그는 "일본 내각은 2차대전 당시 반(反) 파시즘 국가의 국민과 군인들이 어떻게 협력해 파시즘을 물리쳤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만약, 다시 한 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결말은 그때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음.
  
- 중국 "리커창·아베의 악수...아베가 적극적이었다" (10/20, 연합뉴스)
  - 중국은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악수를 한 것에 대해 20일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 (먼저) 악수를 했고 (먼저) 안부를 물은 것"이라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총리가 악수한 것이 중일 양국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이해하는 정보로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대답함.
  - 화 대변인의 이런 답변은 리 총리와 아베 총리의 '악수'를 계기로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내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일종의 경계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일본 자민당 집행부 APEC 이전 중국방문 보류" <산케이> (10/20,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이 다음 달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다니가키 간사장은 APEC 때 중일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와 당의 이원(二元) 외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굳힘.

- 그는 지난달 취임 후 중일 정상회담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으로서도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여러 인사를 보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함.

■ 일본 부총리, 중국 부총리에 양국 정상회담 제안 (10/22,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2일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상무부총리와 만나 다음달 베이징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회담을 제안함.
-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아소 부총리는 장 부총리와 비공식 접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히며, 그는 "(장 부총리에게) 상호 노력으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상황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두 나라의 지도자가 베이징 APEC 정상회의 때 회담을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함.
- 그러나 아소 부총리는 장 부총리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었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두 사람이 7~8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전함.

■ 중국, 일본의 '강제연행 부정' 발언 강력비판 (10/22, 연합뉴스)

- 중국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데 대해 22일 "관련 태도에 엄중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군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웃 국가들에게 저지른 엄중한 반인류적 죄행이며 그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또 "역사적 죄행과 역사적 사실을 뒤집으려는 언행은 결국 사람들에게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일본의 기도에 더욱 경계감을 느끼게 만든다"며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반성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고노 전 관방장관은 고노담화 발표 당일인 1993년 8월 4일에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음.

- "일본-중국 부총리, 베이징서 비공식 회동" <교도> (10/22, 연합뉴스)
  -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상무부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들은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장 부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15분간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전함.
  - 일본이 APEC 재무장관 회의에 재무상을 보낸 것은 4년만으로,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 완화 노력의 하나로 보임.
  
- "후쿠다 전 일본 총리, 29일 시진핑 주석과 회담" <교도> (10/24, 연합뉴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가 29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중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함.
  - 28일 중국을 방문하는 후쿠다 전 총리는 세계 경제인과 정치가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보아오(博鰲) 아시아 포럼' 이사장 자격으로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게 되지만, 중일 정상회담 실현 등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와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싸고 냉각된 중일관계 타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됨.

## 사. 중·러 관계

- 러시아부총리 "중국에 최첨단전투기 판매계약 다음 달 체결" (10/20,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수년간 끌어온 러시아제 최첨단 전투기 Su(수호이)-35 구매 계약을 다음 달 중에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 간 Su-35 거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근했다면서 구체적인 가격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양국 군사기술협력위

- 원회 회의에서 Su-35 거래 계약에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러시아 매체들은 러시아가 다음 달 초순 개최되는 중국 주하이(珠海) 에어쇼에 Us-35를 참가시킨다면서 이 기간 양국 간 이 전투기의 구매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함.

■ 중국-러시아 경찰, 중국서 첫 대테러 훈련 (10/21,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의 경찰이 20일 양국 국경지대에서 처음으로 대테러 합동 훈련을 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1일 보도함.
- '리젠(利劍)-2014'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양국 국경지대인 중국의 내이명구(內蒙古)자치구 만저우리(滿洲里)에서 시행되었음.
- 중국 공안이 국내에서 외국 경찰과 대테러 합동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앞서 지난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테러 대응을 목적으로 한 다자 군사훈련인 '평화사명(和平使命)-2014'을 실시하는 등 대테러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음.

아. 일·러 관계

■ 일본 자위대, 크림 사태 후 러시아와 첫 합동 훈련 (10/22, 연합뉴스)

- 일본 해상막료감부(해군본부에 해당)는 해상자위대가 러시아 해군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일대 해역에서 26일과 28일 이틀간 공동 훈련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 해상막료감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양측은 재난 수색·구조 활동과 해적 대응 등을 연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하마기리'와 초계용 헬기 등을 동원할 예정임.
-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합병한 이후 러시아군과 자위대 첫 공동훈련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견제에도 양측이 필요한 분야에서 공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임.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미 외교협회서 인권보고서 설명회(10/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외교협회(CFR)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요청으로 최근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다루는 행사를 20일 오후 비공개로 개최함.
  - 이날 행사는 미국외교협회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와 언론인의 참석은 제한됐다고 미국외교협회 제이크 메스 언론담당관이 밝힘.
  - 이번 행사에는 유엔북한대표부의 장일훈 차석 대사가 나와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표한 인권 보고서 내용 및 북한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행위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에 대해 유엔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좀더 두고 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외교협회에서 열리는 행사가 북한이 최근 유엔에서 연 인권보고서 설명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함.
  
- 北, 美 중동지역 무인기 공습 비난...“인권유린행위”(10/20,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벌이는 무인기 공습으로 민간인 살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국가'라고 비난했음.
  - 노동신문은 '인권재판관의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6일 미국 무인기의 파키스탄 북부 지방 공습으로 민간들이 숨졌다며 "세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혀야 할 중죄인은 바로 세상을 돌아치며 온갖 못된 인권유린행위를 일삼는 인간살육의 원흉,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침략과 전쟁행위, 인권유린책동에 대처해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보위부, 밀수꾼 압박해 탈북자 신상 파악"(10/20, 데일리NK)
  -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가 국내 정착 탈북자들의 신상 파악을 위해 국경지역 '밀수꾼'들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졌다.
  - 함경북도 소식통은 20일 "도(道) 보위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송금(돈) 작업과 전화연결 등을 하고 있는 밀수꾼들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면서 "집요한 보위원들은 (밀수꾼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탈북자)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소식통은 "보위부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국경경비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작업(밀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밀수꾼들도 알지만 만약을 대비해 그들(보위부)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며 "밀수꾼들도 생계를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위부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 "김정은 ICC 회부하면 대응조치"(10/21,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유엔 보고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反) 인류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모종의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함.
  - 장 차석대사는 유엔 외교관계 위원회 40여 개국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보고서가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지적한 북한 내 수용소들은 '소년원'들로서 "정상적인 교도소"라며 "북한에서는 '정치범'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그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이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북한이) 향후 조사관들에게 수용소 등의 방문을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북, 인도주의 상황 '특별 감시국'"(10/21, 자유아시아방송)
  - 전 세계 국가들의 식량 사정, 안보, 정치, 인권 상황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기 상황을 평가하는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21일 북한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과 관련해 특별 감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했음.
  - '특별감시대상국'은 인도주의적 위기 정도가 높아,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나라를 의미함.

- 이 기구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굶주림 등이 계속적으로 유엔에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함.
- 덧붙여 북한의 아동 사망률, 식량 안보, 식량 가격, 그리고 일반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가 결여된 채 이번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음.
- 또한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 주민 약 1천 600만 명이 만성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고, 240만 명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추정했음.

■ 유엔 北 차석대사 "北 인권 현장실사도 논의 가능"(10/22, 연합뉴스)

-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대화'를 강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인권 실태의 현장실사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장 차석대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자꾸 우리 수뇌부 걸고 드는 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들다"며 "(더이상) 이거 가만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대화하자, 협력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대화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다 뺏치던(안하겠다고 버티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성의를 보이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유엔 등의 (수용소) 현장실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토의해볼 문제"라며 허용할지 말지는 자신의 결심이 아니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선의의 조치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라고 부연함.
-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완전 조작"이라며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며 "자료도 제공하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영국 외교부 "북한인권 공세는 개선 의지 없다는 뜻"(10/22, 미국의 소리)

-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음.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8월 유럽연합 인권 특별대표를 만났을 때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9월13일에는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와 북한인권을 비판하는 다른 보고서들을 거부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북한이 COI 보고서를 반영한 권고안 등 모든 UPR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영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9월에 아동을 인신매매와 성매매,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엔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것을 작은 진전으로 꼽았음.
- 북한 억류 미국인 파울 반년만에 석방...수감자 2명 남아(10/2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가 6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음.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울 씨가 풀려나 북한을 떠나 미국 고향에 있는 가족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파울 씨 석방은 긍정적인 결정"이라면서도 배 씨와 밀러 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석방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해준데 대해 스웨덴 정부에 감사를 포함.
  -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파울 씨의 석방 조건으로 풀려나는 즉시 그가 북한을 떠날 수 있게 운송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고, 미국 국방부가 북한 측이 제시한 일정에 맞춰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미국 정부는 석방 사실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호칭으로 통상 사용했던 'North Korea'라는 단어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북한 "김정은, 오바마 요청 고려해 미국인 석방"(10/23, 미국의 소리)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억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를 석방했다고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하여 미국인 범죄자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시키는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음.

- 이어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은 해당 법적 처리절차에 따라 미국 측에 인도됐다"고 덧붙였다.

■ 중국, 북한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반대(10/23,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추진 문제와 관련해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 분야의 견해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고 언급함.

■ WHO '북한 결핵 발병률 3년 연속 증가'(10/24, 미국의 소리)

- 세계보건기구(WHO)가 22일 발표한 '2014 세계 결핵 보고서'의 국가별 결핵 현황(DPRK Tuberculosis profile)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에서 결핵에 걸린 환자 수는 11만 명에 달하며,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이 지난 3년 연속 증가했음.
-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95명에서 2011년 404명, 2012년 409명에 이어 2013년 429명으로 증가했음.
- 세계보건기구의 필립 글레지우(Philippe Glaziou) 연구원은 2008년 이래 북한 내 결핵 발병 보고율이 증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실제로 발병 환자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보다 쉽게 결핵에 걸렸는지 여부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게 돼 발병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북한 내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년 5.3%비율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결핵 환자 완치율은 92%에 달했음.
- 그러나 2013년 현재 북한에서 3천 9백여 명이 다제내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北 국방위, 美 인권공세 비난... '강력대응전' 천명(10/25,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5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국방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또 미국의 '인권 소동'에 대한 새로운 '강경대응선전'을 포고한다며 "인권 유린자들의 본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우리식의 새로운 강경대응전에 진입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 국방위는 "지금처럼 본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쫓아버리고(함부로 버리고) 유엔을 미국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는 활무대로 방치해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유엔을 비난했음.

■ 북한, 유엔 인권토론회 항의 서한 발송(10/25, 미국의 소리)

- 북한의 자성남 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 17일자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탈북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도발행위라고 주장하며 유엔에서 최근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를 비난했음.

■ 北, 인권문제 전방위 반격... '김정은 구하기' 나서(10/26,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2014년 8월15일 발행)는 '개인을 국제인권법 당사자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제인권법으로 개인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음.
- 논문은 "국제인권법은 인권 보장과 관련한 국가들의 행위 규범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법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며 "국가는 국제인권법 규정에서 합의된 권리·의무를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 이런 이유로 국제인권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국제법적 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할 능력과 자격을 가진 국가라며 "개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표면적으로는 개인을 국제인권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올해 초부터 제기된 북한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임.

## 2. 북한 인권

- 미 "북 인권 위해 우방들과 공조"(10/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2004년 만들어진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주목한 중요한 법안이었다고 평가했음.
  - 올해 초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나왔고, 유엔총회 기간이었던 지난 9월 23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주요 우방국들과 뉴욕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고위급 대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미국은 한국 및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 우방들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북한 당국에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국 통일부, 북한 억류 김정욱 선교사 송환 촉구(10/22, 미국의 소리)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김정욱 선교사도 석방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음.
  -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는 등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미 국무부 VOA 인터뷰 관련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해야"(10/23, 미국의 소리)
  -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VOA의 장일훈 유엔주재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인터뷰와 관련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유엔 조사에서도 입증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인권개선을 촉구했음.
  
- 마이클 커비 "북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드시 세워야"(10/23, 연합뉴스)
  -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호주·보츠와나·파나마 유엔 대표부의 후원을 받아 22일 (현지시간) 개최한 토론회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북한이 양보하는 대가로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바꿔치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함.

-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유엔대표부의 김송 참사관 등도 참가했으며, 북한 대표들은 COI보고서가 유도신문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북한 최고권력자가 북한인권 유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음.
  - 이에 대해 커비 전 위원장은 유도신문은 없었고 보고서는 공정하게 작성됐으며 연성을 높이기도 했으며, 국제법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를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이를 막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라고 반박했음.
  - 또한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와 관련한 논쟁을 하도록 북한 방문을 허용하라고 요청했고 북한 주민들도 COI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음.
  - 토론회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이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음.
- 북 인권문제, 핵심은 '연좌제' 폐지(10/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비인간적인 '연좌죄(연좌제)' 제도부터 끝장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10월 20일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이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정치범 자체라는 말도 모른다며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탈북자들이 꾸며낸 조작이라고 반박했음.
  - 이에 대해 북한 현지 소식통들은 매우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23일 북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정치범수용소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나라(북한)의 '연좌죄' 제도"라며 "지금까지 아무런 죄도 없이 '연좌죄'가 적용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꼽으라면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 소식통은 정치범수용소엔 대부분 종교 활동에 연루됐거나 정치제도를 반대한 사람들, 그리고 숙청된 간부의 가족과 친척들이 갇혀 있다며 그들은 모두 본인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나 '연좌죄'가 적용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주장했다.
- 케리 국무장관 "북한 미국인 석방에 대가 없어"(10/23, 미국의 소리)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의 석방과 관련해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고 밝힘.

-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아직 남아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이들의 석방을 위해 가족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고 중국 등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무부 "억류자 관련 대북사과 없을 것"(10/23, 미국의 소리)
- 북한 당국은 법학 교수를 동원해 억류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미 국무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음.
  - 미국의 AP통신이 23일 이례적으로 평양에서 북한 법학 교수들과 인터뷰를 했으며, 북한 당국이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인터뷰에서 북한 교수들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2명이 석방되려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official statement of apology)과 그들에 대한 정식 석방요청(formal request for their release)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미국인 억류 문제는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문제며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23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측의 공식사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이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
- 몬트레이서 북한인권 영화제... 이장호 감독 간증도 "북녘 동포들의 참상을 본다"(10/24, 샌프란시스코중앙일보)
- 내달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북한인권 국제 영화제'와 '이장호 영화감독 초청 간증회'가 몬트레이 영락교회에서 열림.
  - 2011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북한인권 국제영화제'는 북한인권의 현실과 통일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조명, 북한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 있음.

- 미 국무부 버스비 부차관보 "인권 관련 대북제재 적극 고려"(10/24, 미국의 소리)
  -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버스비 부차관보는 23일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나 새로운 국제법정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에 법정에 설치하는 방안 등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그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인정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이클 커비, 유엔재단-미국유엔협회 인권상 수상(10/25, 미국의 소리)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위원장이 유엔 재단과 미국 유엔협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올해 레오 네바스 인권상을 수상함.
  - 유엔 재단과 미국 유엔협회는 커비 전 위원장이 COI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해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커비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COI 보고서를 발표한 뒤에도 쉬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COI권고안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근 북한의 잇단 인권 공세는 바로 COI보고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다.

### 3. 탈북자

- 위성락 대사 "러시아, 탈북자 강제 송환 안해"(10/20, 연합뉴스)
  - 러시아 주재 위성락 대사는 20일(현지시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면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협정을 협의 중이고 실제로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 송환한 사례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논평을 요구한 데 대해, 북·러 간 현재 불법 체류자 상호 송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러시아로 탈북한 북한 주민이 강제로 송환되는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족 탈북자 가정의 비극' 부각...정책전환 간접촉구 해석(10/21, 연합뉴스)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1일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기사에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강제북송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조선족-탈북자 가정의 비극'을 심층 조명한 기사를 게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됨.
  - 신문은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북송과 그로 인한 비극적 실례들을 거론하며 "중국의 조선족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는 가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 탈북 여대생 박연미, 눈물의 호소 "탈북하던 날, 엄마 성폭행 목격..북송 막아달라"(10/22, 이데일리)
  - 여대생 탈북자 박연미는 2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 참석해 암담하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했음.
  - 박 씨는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북한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음.
- 부시 전 대통령, 탈북자 초청 인권 토론회(10/24, 자유아시아방송)
  -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국 '부시센터'에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다섯 명과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인권 토론회(North Korea Roundtable)를 개최했음.

- 미국 워싱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 등 북한인권 향상에 '부시센터'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 부시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시 전 대통령이 10년 전 서명해 폐지화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5명의 탈북자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 4. 이산가족

- 재미 한인 이산가족 방북...유골 반출 요청 계획(10/20, 미국의 소리)
  - 한국계 미국인 2명이 가족 상봉을 위해 18일 북한을 방문했으며, 숨진 가족의 유골 반출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북한 측의 반응이 주목됨.
  -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방홍규(86), 이건용(77) 씨는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이북5도민 연합회'의 주선으로 15일 출국해 18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이번 방북 기간 동안 누나 유골의 일부라도 반출할 수 있는지 북한 측에 문의할 계획임.
  - 이번 가족 상봉은 당국 차원이 아닌, 민간 기구가 북한 측과 직접 접촉해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주목됨.
  - '북가주 이북5도민 연합회' 백행기 사무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회원들의 북한 내 가족 상봉 가능성을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타진한 뒤 1년 여 만에 승인을 얻어냈음.
  - 특히 북한 당국은 그 동안 이산가족 상봉 시 신청자들로부터 비료와 옥수수 값 명목으로 받아온 '지원금'도 절반 이상 낮추는 등 성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백 사무총장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현지에 묻힌 이산가족의 유골 반출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첫 번째 방북을 순조롭게 마치면 북한 당국과 협의해 이 행사를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산가족 절반이 80세 이상…화상상봉 장치는 ‘방치’(10/22, 아시아경제)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적십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체 이산가족 신청자 12만9571명 가운데 생존자는 80~89세 2만8907명에 불과하며, 90세 이상은 7352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의원은 27억 원을 들여 화상상봉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7년간 한 차례의 유지보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화상상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 심윤조 "이산가족 사망자 수 내년 생존자 수 앞지를 듯"(10/24, 머니투데이)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도 연도별 이산가족 생존자, 사망자, 신청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평균 3800여명의 이산가족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 9591명 중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수는 6만9279명으로 올해 처음 6만 명대로 떨어진 반면, 이미 세상을 떠난 이산가족 사망자 수는 6만312명으로 올해 처음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음.
  - 2010년 이래 매년 평균적으로 3800여명의 이산가족 사망자가 발생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 말에는 이산가족 신청자 전체 인원 가운데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생존 이산가족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6%가 8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음.
  - 심 의원은 이산가족 고령화를 우려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번에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의제로 삼아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 5. 납북자

- 일본, 납치조사 파악위해 평양에 당국자 파견하기로(10/20,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방북단에는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스가 장관은 파견 시기에 언급,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시간을 두는 것은 아니다"며 되도록 이른 시기에 파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으며, 일본 언론은 이르면 이달 중 대표단이 방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 "납치문제 해결노력, 北위협대처 영향 없어야"(10/21, 연합뉴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일본의 "이런 노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공통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양국 및 한미일 간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음.
  
- 일본 당국자들, 납치조사상황 청취 위해 27일 북한 방문(10/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납치 피해자 재조사 상황을 청취할 실무자 팀을 27~30일 일정으로 북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 당국자 북한 파견에 우려(10/22, 미국의 소리)
  -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문제 담당상이 20일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당국자들을 북한에 파견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부의 그 같은 계획에 우려를 표했음.
  - 일본인 납치피해자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회장은 피해자 가족들은 현 단계에서 당국자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당국자들의 방북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피해자 가족들은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했음.

##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북지원사업 미흡...예산 40억 중 3억 집행"(10/21, 민중의소리)
  - 개발도상국가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대북의료지원사업을 미흡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
  - 2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보건의료지원사업 예산은 40억6천여만 원이지만, 8월까지 실제 집행된 예산은 그중 7.9%인 3억2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예산 집행율은 11%에 그쳤음.
  - 김 의원은 "재단은 정부의 5.24 조치로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여러 민간단체들도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 조치만을 기다리며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카리타스, 북에 새 온실 15동 추진(10/21,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카리타스 북한지원팀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북한지원사업으로 북한 내 3개 지역에 15개 온실을 세울 예정임.
  - 북한지원팀 관계자들은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해 온실 부지 5곳을 살펴보고 공사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당초 함경남도 함흥과 강원도 원산 등에 더해 평양 인근 지역이 추가되어 평양 2동, 함경남도 9동, 그리고 강원도에 4동의

온실이 들어서게 될 예정임.

- 온실은 결핵 요양원 옆에 건설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모두 결핵과 간염환자의 회복을 위한 영양보충식으로 제공할 계획임.
- 이번 온실 신축사업은 지난 8월 독일 정부가 지원한 60만 달러로 충당함.

■ "유엔 식량농업기구, 북한에 산림복구 사업 제안"(10/22, 미국의 소리)

-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북측에 제안했으며, 북한이 동의하면 사업에 착수할 계획임.
- 한국 산림청에서 FAO로 파견된 전범권 산림정책관은 FAO가 지난 7월 중국 옌지에서 열린 북한 산림화 관련 국제 학술회의에서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힘.
- FAO는 북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산림 조성 및 산림 경관 복원 사업(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Project)을 제안했음.
- 전범권 정책관은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음.

■ 캐나다 NGO 지원 메주콩 40t, 남포항 도착(10/23, 미국의 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콩우유로 가공될 메주콩 40t이 지난 15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음.
-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이번에 지원된 메주콩이 남포와 원산에 있는 식료 공장에 보내진다고 밝혔음.
- 퍼스트 스텝스는 콩우유 외에 북한에 보낼 복합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도 약 250만 포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 유럽 리히텐슈타인, 4년 연속 대북식량지원(10/25, 노컷뉴스)

- 미국 주재 리히텐슈타인 클라우디아 프리체 대사는 "리히텐슈타인의 대북식량지원 기부금 22만 달러를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 프리체 대사는 "북한 어린이 네 명 중 한 명꼴로 영양실조로 알려져 있다"면서 "리히텐슈타인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 구호단체, B형 간염 예방접종 위해 11월 방북(10/25, 미국의 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10여 명이 방북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현지의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임.
  - 단체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계속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발행한 소식지에서 북한 주민 12%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이고, 이 가운데 15%에서 25%가 간암이나 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B형 간염 환자들이 고가의 항바이러스 약품을 평생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방북 기간 중 북한 국립결핵연구소 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도 교육할 예정이며, 후원하고 있는 25개 결핵 보건 시설을 방문해 식량과 의약품 등 지원 물품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지난 달 설치한 수도시설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도 살펴볼 예정임.

## 8. 북한동향

- 미국의 중동지역 무인기 공습(민간인 8명 사망, 6명 부상)을 거론하며 "미국의 '반테러전'이 인권유린, 인간 살육전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혀야 할 중죄인'이라고 비난(10.20,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재판관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행위)
-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최근 대북발언(北의 핵과 인권문제 등)에 대해 "얼빠진 잠꼬대"라고 비난하며 '이들 때문에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찬서리를 맞고 있다'고 주장(10.20, 중앙통신·노동신문/식민지 하수인들의 얼빠진 잠꼬대)

- 미국의 중동지역 무인기 공습(민간인 8명 사망, 6명 부상)을 거론하며 "미국의 '반테러전'이 인권유린, 인간 살육전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혀야 할 중죄인'이라고 비난(10.20,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재판관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행위)
- 【北중앙통신사 보도(10.22)】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오바마' 美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하여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간략 보도(10.22,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